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210
제2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215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2018년 9월)

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대치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핵과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도 튼튼한 국방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군사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신뢰구축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연계하여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 **정책 배경** ■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였다. 급기야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안보상황하에서 남북 간 더 이상의 도발과 제재,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발전 전략이 필요하였고, 마침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였다.

■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경과** ■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한 이래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6월 24일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축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7월에는 ‘베를린 구상’¹⁾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9월 유엔 기조연설 등 외교무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는 일관된 메시지

1)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 코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돌파구로 남북 대화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4대 실천 과제를 북한에 제안

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에 북한은 2018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제안에 호응해 오기 시작하였다. 2018년 1월 9일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 및 예술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화답하였다. 그리고 남과 북은 마침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11년 만의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선언)」²⁾을 발표하였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상호 불가침 합의 준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어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 이행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 위에 남북관계의 확대·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³⁾에 합의하였다.



2018 남북 정상 회담 시 공동 식수 행사(2018년 4월)

| 우리 군의 노력 |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되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노력에 맞추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2017년 7월 17일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개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즉각 호응하지는 않았으나, 2018년 4월 남북 정상 회담 개최를 전후로 남과 북은 상호 적대행위 중지의 상징적 조치로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관련 장비를 철거하였다.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는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서 일체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군

2)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 정상 회담 합의문으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천명

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비롯하여 다방면의 실천 방안에 합의

4) 국방부는 2018년 4월 23일 00시부터 비무장지대 일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5월 1일부터 4일까지 장비를 철거했으며, 북한군 역시 4월 24일에 방송을 중단하고, 5월 1~2일 사이에 장비를 철거

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2018년 6월 14일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4 합의서」⁵⁾ 복원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구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 간 국제상선 공동망 운용이 2018년 7월 1일부터 정상화되었다. 또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도 완전 복구되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7월 16일부터,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18년 6월)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8월 15일부터 정상화되었다. 2018년 7월 31일에는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어, 「판문점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등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상호 견해 일치를 이루었고,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의 다양한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실제 조치를 담은 합의서안을 수차례의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협의하였고 2018년 9월 13일에는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합의서의 최종 문안을 조율하였다. 마침내 2018년 9월 19일 남북 국방장관은 양 정상에 지켜보는 가운데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이행실태를 중간 평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 11월 1일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였고, 남·북·유엔사는 총 3차례의 '3자 협

5)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6·4 합의서)」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채택되었으며, 서해 해상의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①국제상선 공동망 이용, ②기류 및 발광신호규정 제정 및 활용, ③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 교환, ④서해통신연락소 설치 등을 포함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의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 이행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시범 철수하기로 한 11개 GP에서 화기·장비 및 인원을 철수시키고 2018년 11월 30일에는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한 1개 GP를 제외한 10개 GP에 대해 철거·파괴 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12일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중단하면서 시범적 철수 대상이었던 11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진행하였다. 비무장지대 내 철원 지역 화살머리고지에서는 2019년 4월로 예정된 공동유해발굴 개시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뢰 제거 및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한강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동수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방부는 군사 분야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견인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 평화체제⁶⁾ 구축 |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현 정부도 2017년 5월 출범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우리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 의지에 북한이 호응해 오면서,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정전체제 및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등을 통해 남북 간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반도 종전선언' 등을 통해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진전과 연계하여, 군사적으로도 본격적인 신뢰구축과 함께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오랜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 공존과 공동

6)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상호신뢰가 구축되어 법적·제도적·실제적으로 공고하게 평화가 보장된 상태



북한 DMZ 내 GP 목록

변영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 군비통제⁷⁾ 추진 | 남북은 「관문점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과거 「남북기본합의서」⁸⁾에서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양 정상의 의지를 「관문점선언」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남북 군사당국은 「관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관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남북이 최초로 군사력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실천 방안에 합의하여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분쟁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와 서해가 평화의 땅, 평화의 바다로 전환되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탈바꿈하는 분기점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 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운용적 군비통제’⁹⁾와 ‘구조적 군비통제’¹⁰⁾를 위한 제반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우선, 「관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상시 군사회담체계 구축,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대규모 군사활동의 제한, 군사력 배치 제한·조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7) 잠재 적대국 간 군비경쟁의 안정화, 즉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병력, 무기)를 통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과 부담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여 안보를 증대하려는 모든 노력

8)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 : 남과 북은 대량살상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9) 군사력의 구조나 규모를 변경하지 않고 군사력의 운용과 배치에 대한 제한(Constraint)을 통해 기습공격과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감소 및 방지하는 군사적 조치(運用的 軍備統制, Operational Arms Control)

10) 군사력의 규모, 편성 등 군사력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인 병력과 무기체계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제한 및 감축하여 군사적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제반 군사적 조치(構造的 軍備統制, Structural Arms Control)

제2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국방부는 남북 통행의 군사적 보장 및 군 통신선 운영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 및 접촉과 왕래가 활성화되는 데에 따라 군사적 보장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다.

1.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 개요 ■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다방면의 남북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동해·경의선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동·서해지구에서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여 정상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 간 통행·통신 등을 유지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남북 통행의 군사적 보장 ■ 남북한 사이의 직접 통행은 대부분 육로 통행이며 간헐적으로 해로와 공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육로 통행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내의 도로와 철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철도 통행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되었다. 육로 통행의 대부분도 개성공단 출입을 목적으로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이루어졌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중단되었다. 최근 새로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의 한국 방문 시에 서해지구를 이용하는 등 도로 통행이 재개되었다. 육로 통행 시 우리 군은 유엔사 및 북한군과 협의하여 군사적 보장조치를 이행하고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남북 통행에 대한 경계와 호송을 제



남북관리구역 육로 통행 호송(동해지구)

공하고 있다.

해로 통행은 '5·24 조치'¹¹⁾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되면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예술단이 탑승한 만경봉92호가 북한 원산항에서 출항하여 우리 묵호항에 입항하면서 해로 통행이 재개되었다. 향후 해로 통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우리 군은 남북 간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할 것이다.

공로 통행은 일반적으로 서해 임시 직항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2018년 2월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한국 방문, 이어서 3월 한국 특별사절단과 예술단의 북한 방문 시에 서해 임시 직항로를 이용하였다. 2018년 1월 북한 마식령스키장 남북공동훈련 선수단과 5월 북한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한 한국기자단 방문 시에는 동해 임시 직항로를 이용하였다. 7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방문단은 우리 공군 수송기를 이용하여 북한을 방문하였고, 우리 공군 수송기는 9월 평양 정상 회담 관련 물품과 정상 회담 답례품인 '제주산 감귤' 수송도 지원하였다. 우리 군은 동·서해 임시 직항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남북 군 통신선 운영 ■ 남북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남과 북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 연락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남과 북은 2002년 9월 17일 남북 군 상황실 간 통신선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2년 9월 24일에는 서해지구에, 2003년 12월 5일에는 동해지구에 군 통신선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동해지구 군 통신선이 2010년 11월 산발로 소실되고, 2016년 2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이후 북한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약 2년간 남북 간 군 통신선이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이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서 군 통신선 복원에 합의하면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다시 복구되었으나, 노후화의 문제 등으로 유선통화만 가능한 상태로 운영되었다. 이에 2018년 6월 14일 남북 군사당국은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단절된 동해지구 군 통신선과 노후화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6월 25일에는 '남북통신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였다.



남북통신실무접촉(2018년 6월)

11)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하여 정부가 발표한(2010. 5. 24.) 대북정책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개성공단 제외), 우리 국민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

남북 군사당국은 2018년 7월 16일에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8월 15일에는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여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였다.¹²⁾ 군 통신선이 정상화됨에 따라, 국방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 등 남북 간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 군 통신선 정상화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국군포로 문제 해결

국군포로 생사 확인, 상봉 및 송환 | 우리 정부는 1994년 국군포로 고(故) 조창호 중위의 귀환 이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 송환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 대화를 통해 국군포로의 생존 확인과 송환 문제를 남북 화해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자력으로 탈북하여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에 이르며, 귀환 국군포로 현황은 [도표 7-1]과 같다. 2011년 이후부터는 국군포로의 고령화, 북한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로 국군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귀환한 국군포로는 2018년 12월 말 기준 27명이 생존해 있다.

[도표 7-1] 귀환 국군포로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 명

연도	총계	1994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018
포로	80	1	1	4	2	9	6	6	5	14	11	7	4	6	3	1	-

우리 정부는 제3국으로 탈북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탈북 사실이 확인되면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조속히 국내로 송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¹²⁾ 정부는 군 통신선 정상화를 위한 대북 물품 지원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는 2018년 7월 14일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북한에 지원하는 자재 및 장비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승인

한편 북한이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제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은 2000년 6월 정상 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선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협의·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006년 2월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하여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2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과 4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2013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 따라 2014년 국군포로 20명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2018년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한 국군포로는 56명에 달하며 이 중 18명이 가족과 재회하였다.

■ 귀환 국군포로 정착 지원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환포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귀환 가족도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하여 북한 이탈주민으로서의 대우 및 지원 이외에 세 대별로 별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가정방문, 초청 행사 등을 통해 귀환 국군포로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해소하는 등 정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연금 형태의 위로 지원금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귀환 국군포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귀환 국군포로 초청 행사

국방부는 각종 남북회담을 통해 국군포로 생존 확인과 송환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국군포로와 가족의 탈북 시 안전한 국내 송환을 위해 제3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귀환 국군포로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전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다.

